2022 NABO 연차보고서

2022 NABO Annual Report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목차

NABO

Ⅰ. 기관소개

- 국회예산정책처 06
- 업무추진 기본방향 07
- 주요 연혁 08
- 조직 및 예산 10

Ⅱ. 주요성과 및 활동

-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15
-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6
-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 17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18
-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19
-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및 확대 20
- NABO 소식 24

Ⅲ. 연구·분석보고서

-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33
- 예·결산 분석 40
- 재정사업평가 46
-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53
- 조세분석 및 연구 57
-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62

Ⅳ. 정기간행물

- NABO Focus 66
- NABO 재정동향&이슈 67
-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68
- NABO 경제 동향 69
- 예산춘추 70
- 예산정책연구 71

Ⅴ. 법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회답

- 법안비용추계 현황 74
-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75
- 법안비용추계와 조사·분석의 요구 및 회답 절차 76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HAPTER

I

기관 소개

- 국회예산정책처
- 업무추진 기본방향
- 주요 연혁
- 조직 및 예산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설립 근거 및 목적

「국회법」 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예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직무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부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재정
연구·분석·평가

입법부의
재정전문기관

업무추진 기본방향

General Direction of Our Work

비전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

미션

- 통찰력 있는 재정분석과 객관적인 재정사업 평가
- 정확·신속한 의안비용추계와 세제분석
- 신뢰성 있는 경제전망과 분석

직무 수행 원칙

전문성 + 중립성 + 객관성

주요 연혁

Timeline

2003 **2004** **2012** **2015** **2018**

2003. 1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03년 10월 설립 이후 예결산 분석을 실시하여 국회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안과 결산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에 기여

2004. 8.
거시경제 전망 실시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경제전망 실시

2012. 6.
장기 재정전망 실시

향후 30년 이상의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여 국내 최초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부담에 대하여 분석

2015. 3.
국회예산정책처로 의안비용추계 일원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전담하고, 위원회 대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공

2018. 9.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 서비스 개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통계와 경제통계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서비스 시작

2019

2019. 11.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실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에 대한 수입·지출과 국가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전망을 실시하여 사회 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점검

2020

2020. 8.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발간

한국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인구구조·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전략 검토

2021

2020~2021
코로나19 대응·회복 지원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적시적으로 실시(2020년 총 4회, 2021년 총 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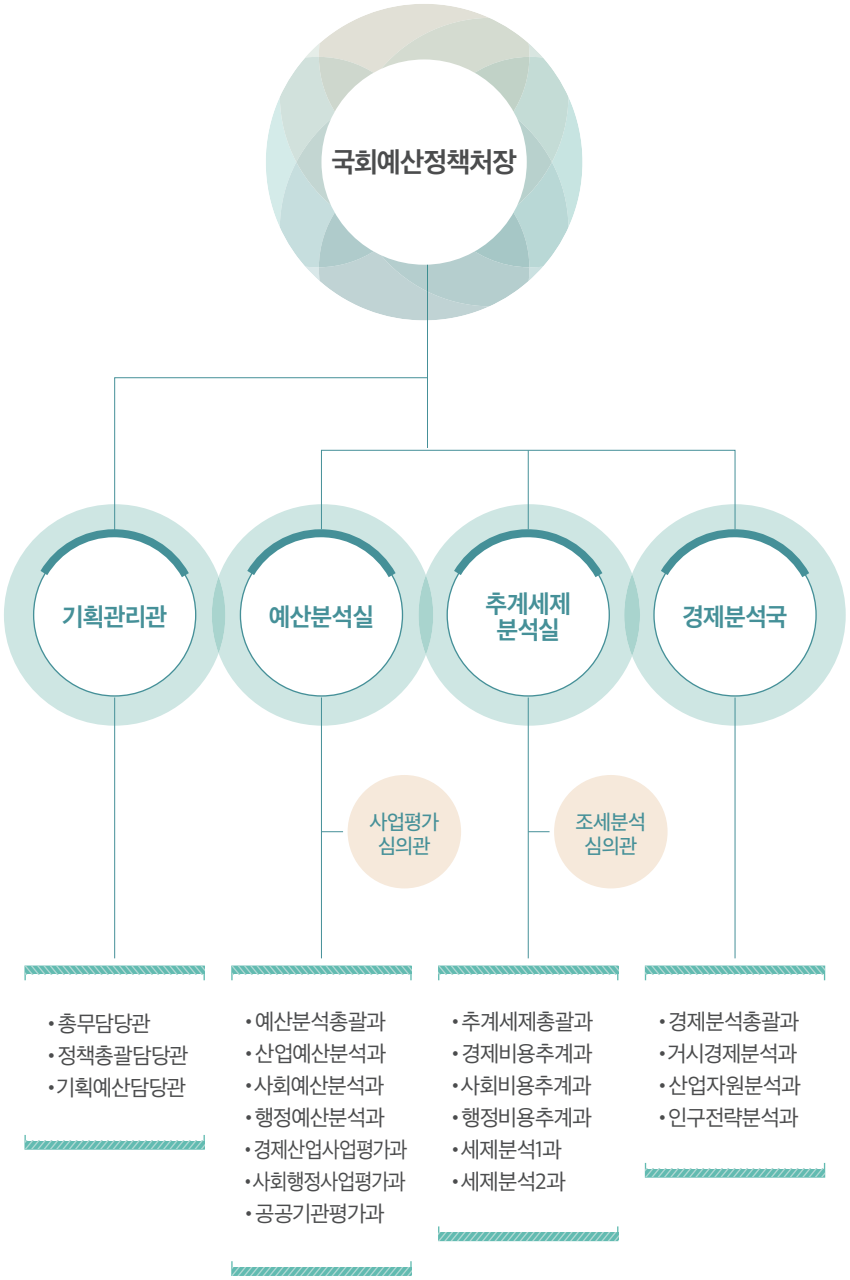
2022. 7.~12.
의정활동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정·경제분야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경제학회 등 5건)

조직 및 예산
Organization and Budget

조직

2실 1국 1관, 2심의관, 3담당관, 17과



인력

분석·연구부서

111명

행정지원 업무부서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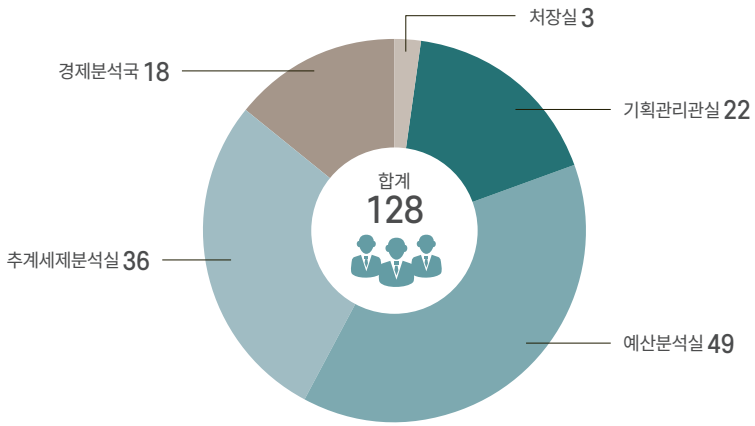
정원 외 인원

46명

직제상 정원: 138명(분석·연구부서 111명, 행정지원 업무부서 24명)

현원: 128명(2022. 12. 31. 기준)

(단위: 명)



정원 외 인원: 46명

(단위: 명)

구분	인원	비고
전문임기제	9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행정실무원	27	행정업무 지원
영문에디터	1	국제회의 통번역, 영문 보도자료 작성 등
자료분석연구원(RA)	9	자료·정보의 수집과 업무보조
합계	46	

예산

2022 집행액

192억원

2022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합계 19,243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HAPTER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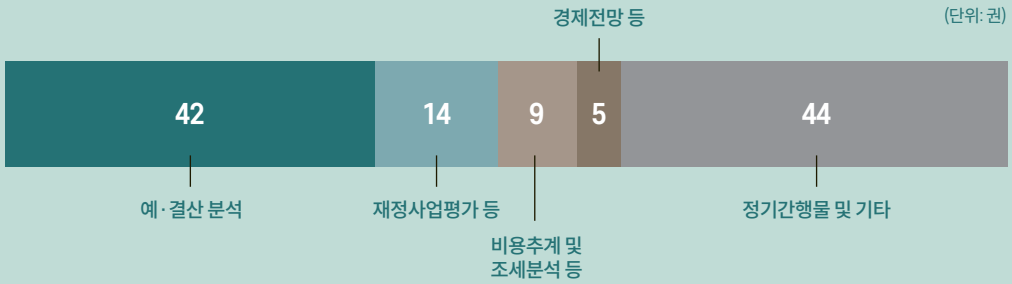
주요 성과 및 활동

-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및 확대
- NABO 소식

2022 NABO 주요 실적

NABO 보고서 발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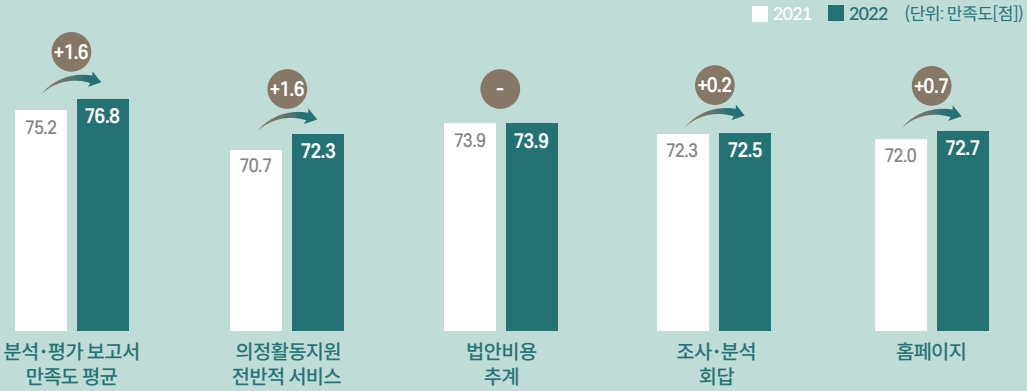
연 **114**권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수행)

전반적 만족도 **1.6**점 상승



Ⅱ
주요 성과 및 활동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일자
10. 25.

장소
국회의정관 3층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사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토론회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23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과 중점투자방향"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과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거시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시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등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해당 재원을 민간투자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고용창출 등에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정책별 주요 분석내용을 설명하였다.

발표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 정의당 배진교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심사 방향과 중점 심사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예산안 심사의 방향 및 재정 관리 필요성 등에 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II
주요 성과 및 활동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일자
11. 7.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개회식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는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된 202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개편으로 평가하고,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 정의당 장혜영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세법개정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로 섭외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

일자
11. 15.

장소
국회의정관 3층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재정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토론회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개편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 악화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별회계의 재원구조와 주요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방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산정 방식이 가지는 예측가능성·재원안정성 문제의 개선방안으로서 OECD 교육재정 지표 활용을 제안하였으며,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안에 대해 그 지출범위를 고등교육에 한정하기보다는 초·중등 교육재정과 고등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재정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II
주요 성과 및 활동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에 따라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9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재정·경제 및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행정학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내용]

구분		일시	회의 및 자문 안건
전체회의		7. 20. 12. 22.	• 인구감소 및 불균형(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위기), 기후변화, 세계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 등 재정경제 환경변화를 고려한 향후 정책의 운용방향 • 재정지출, 재정개혁, 세제 및 경제 분야와 관련된 예산정책처의 역할과 중점 연구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발전방안 및 2023년도 업무방향 등
분과회의	예산분석	4. 13.	•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예·결산 중점 분석사항
	추계세제분석	5. 13. 9. 28.	• 지속가능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추계세제분석실의 역할 • 세입전망 및 세법개정안 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방안 등
	경제분석	11. 29.	• 고금리·고물가 시대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성 •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금융리스크 • 고용 둔화와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등

[제9기 예산정책자문위원 명단(총 19인, 가나다순)]

하연섭 연세대 교수(위원장),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승기 전 국회 사무차장(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시호 연세대 교수, 김영세 성균관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홍균 서강대 교수, 류철 KDI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신자은 KDI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www.nabostats.go.kr)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경제와 관련된 주요 통계 및 분석틀을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이다. NABOSTATS는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재정·경제 지표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정리·재구성한 위원회별 통계,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한 예·결산 심사연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ABOSTATS www.nabostats.go.kr

2018년 515건으로 시작된 NABOSTATS는 제공하는 재정·경제 지표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여 2022년 660건의 통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의 신속한 최신화가 가능하도록 OPEN-API를 활용한 자동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99건이었던 연동 건수는 2022년 380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NABOSTATS는 통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시각화 방식과 분석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NABOSTATS 통계 유형 및 주요 내용]

유형	주요 구성 내용	통계 수
재정통계	세입세출통계, 분야별·유형별 예산, 예산과정	66
조세통계	국세, 지방세, 국제조세 및 조세특례	33
지방재정	지방재정 구조, 지역별 지방재정 여건	13
공공기관 통계	공공기관의 지정현황, 인력현황, 재무현황	14
경제통계	국민계정, 산업 및 고용, 대외경제, 물가·통화	39
인구·사회통계	인구 수 및 인구 추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	29
위원회별 통계	상임위별 재정현황, 주요 정책 통계	336
북한통계	남북한 경제협력·교류, 남북 비교, 북한 인구·경제 등	98
국제통계	OECD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등	27
예·결산 심사연혁	예산 수정내역, 예산부대의견,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등	5
합계		660

II
주요 성과 및 활동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및 확대

일시
2. 22.(화상회의)

참석자
- NABO 백경엽 세제 분석2과장 등
- 무디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Christian De Guzman)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수석이사 등 무디스 연례협의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연례협의

- 한국판 뉴딜정책의 재정적 영향, 고령화가 공공지출 및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평가 등 논의

일시
5. 5. ~ 5. 6.

장소
아일랜드 더블린

참석자
- 32개 IFI 회원국,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OECD 등 약 115명

제14회 OECD 독립재정기구(IFI) 및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 회의

- 독립재정기구와 녹색예산 분석, 기후위원회와의 업무협의, 정책사업에 대한 독립적 비용추계(모범사례, 동태 추계), 외부 홍보전략(미디어, 대중) 및 효과적인 감독기관 구축방안 등에 대한 사례 발표 및 논의점 공유

몽골 국회사무처 대표단 면담

일시
5. 12.

장소
국회의정관 417호

참석자
- NABO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윤주철·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황종률 경제분석관 등
- 몽골 룹산떠르쯔 을지새흥(Luvsandorj ULZIISAIKHAN) 국회사무총장 등 10명

- 양 기관의 업무와 비전 공유
- 상호 교류 및 방문 활성화 방안,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의견 교류
- 한국의 법안 비용추계, 예산안 분석과 집행 평가·모니터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

TDB(동남아프리카 무역개발은행)-모잠비크 KSP 연수사업단 면담

일시
8. 11.

장소
국회의정관 417호

참석자
- NABO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강지혜 예산분석관,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등
- 모잠비크 에스떼 호세(Ester dos Santos José) 재무부 공공부채관리국장 등 8명

- 국가 채무관리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인도네시아 하원 총무위원회 대표단 면담

일시
11. 17.

장소
국회의정관 417호

참석자
- NABO 조의섭 처장, 임명현 기획관리관 등
- 인도네시아 아궁 부티 산토소(Agung Budi Santoso) 위원장 및 아흐맛 딤야티 나타쿠수바 (Achmad Dimyati Natakusumah) 부위원장(방문단장) 등 15명
- 젤다 울란 카르티카 (Zelda Wulan Kartika)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

- 양국 의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의 설립 등 아시아 국가 의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오스트리아 의회사무처 법률·과학국장 면담

일시
11. 23.

장소
국회의정관 505호

참석자
- NABO 임명현 기획관리관,
- 오스트리아 게를린데 바그너(Gerlinde WAGNER) 의회사무처 법률·과학국장

- 녹색예산(Green Budgeting) 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예산분석의 역할 기대
- 양 기관간의 상호 전문가 교류와 같은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예산처장 및 예산상임위원회 면담

일시
12. 7.

장소
국회의정관 417호

참석자
- NABO 조의섭 처장, 임명현 기획관리관,
- 남아공 의회예산처 두미사니 잔치스 (Dumisani Jatjies) 처장
- 스피소 부텔레지 (Sfiso Buthelezi) 위원장 등 하원 예산 상임위원회 16명

-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활동 현황 및 역할, 경제·재정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 비용추계 및 분석 기법 교류 등 향후 관계 발전 논의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일시
12. 8.

장소
국회의정관 505호

참석자
- NABO 임명현 기획관리관,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등
- AMRO 리 코우칭 (Li Kouqig) AMRO 소장 및 케빈 쳉(Kevin C. Cheng) 단장 등 7명

- 한국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해 면담
- 한국 재정 상황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 교류
- 한국의 경제 현황 파악 및 전망 등

II
주요성과 및 활동

NABO 소식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일시 1. 26. **장소** 국회 접견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소속기관들과 함께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임익상 처장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제21대 국회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효과적·중립적 의정활동 지원', '민생 중심 실용적 연구·분석', '미래비전 연구 및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이라는 3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하여 세종시에 소재한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재정·경제 분야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CBO, OECD 등의 주요 국외 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10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취임식

일시 8. 24. **장소** 국회의정관 105호

제10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의 취임식이 열렸다. 조의섭 신임 처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23일(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24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취임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험난한 재정환경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업무보고

일시 8. 26. **장소** 국회 접견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 후반기 국회를 맞이하여 국회의장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조의섭 처장은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 '민생', '소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추계를 정교화하는 등 국회 재정 심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을 위한 연구·분석을 실시하는 동시에, 조직 안팎으로 소통을 확대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계획을 밝혔다.

설립 19주년 기념식

일시 10. 27. **장소** 국회의정관 3층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내·외빈과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9년간 정책 연구의 경험과 역량이 쌓이면서, 복잡다단한 국회의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잘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정책 결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 국회예산정책처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의 길잡이인 국회예산정책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의섭 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람으로 따지면 19세는 청소년을 넘어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로, 그동안 구축한 업무노하우를 토대로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험난한 재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직무수행의 원칙인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은 더욱 견고하게 지켜나가며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 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이 각각 수상했다.

NABO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일시 12. 1. **장소** 국회의정관 505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에세이 공모전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은 신정욱(1명), 최우수상은 강현석, 박상현(2명), 우수상은 이윤진, 박서현, 최하영(3명) 등 6명이 각각 수상했다.

사랑의 떡 나눔 봉사활동

일시 12. 21. **장소** 서울삼성원

조의섭 처장과 직원 40여명은 연말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장애를 딛고 생산활동에 매진하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의섭 처장과 직원들은 법인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삼성떡프린스"에 격려금과 격려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직접 떡을 만들어 인근 아동·노인복지시설에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업무협약 현황

기관	일시	주요내용
한국경제학회	7. 4.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업무교류를 활성화하여 재정·경제 분야 연구에 활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1. 10.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국가 예·결산 정책에 대한 정보와 방향 공유 등 협력
빅데이터 국회	11. 21.	경제·금융·재정·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유한 정책기관들과의 협력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 및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 21.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전문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경제·인문사회 분야 조사·기획·평가 등 협력 지원, 예·결산 정책과 연계한 전문분야별 인력 교류 등 협력
한국재정법학회	12. 21.	재정·예산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공동 협력 등

한국경제학회 업무협약(7.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업무협약(11. 10.)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11.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11. 21.)

한국재정법학회 업무협약(12. 21.)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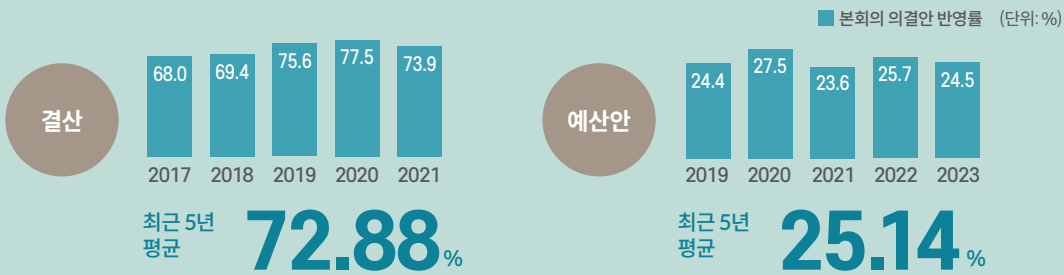
III

연구·분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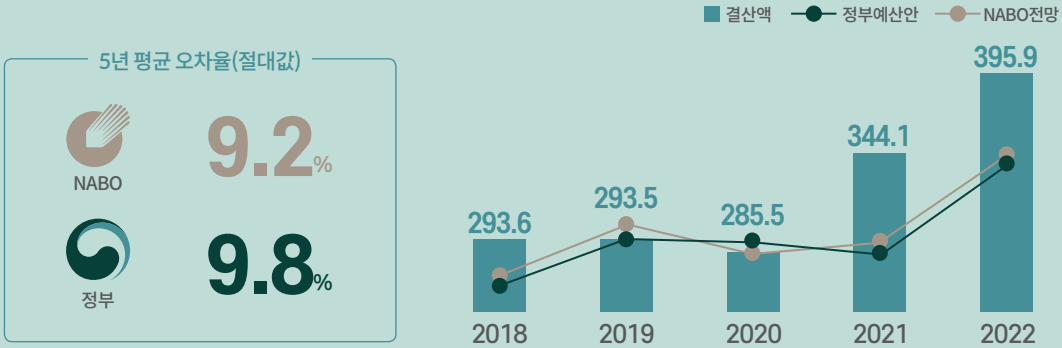
-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 예·결산 분석
- 재정사업평가
-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 조세분석 및 연구
-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2022 NABO 주요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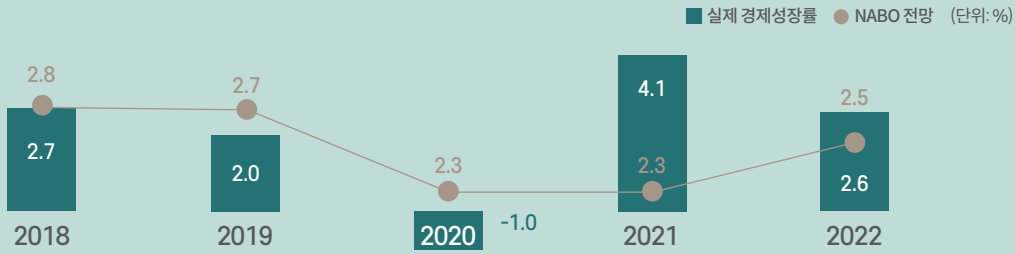
NABO 보고서를 활용한 예산안·결산 국회심사 반영실적



국세수입 전망



경제성장률 분석



Ⅲ
연구·분석보고서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2022 대한민국 재정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발간일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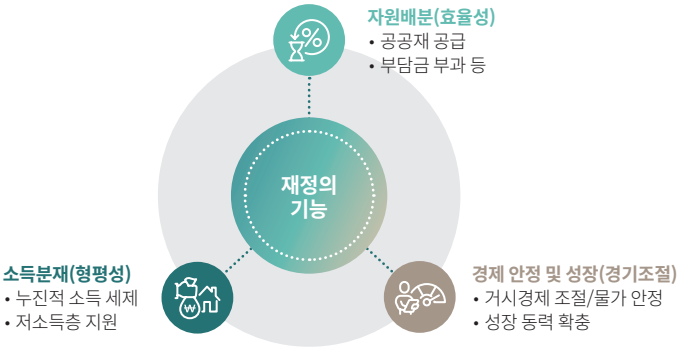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2022년 3월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신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여 왔다. 이번에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은 총 3부 2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하였다. 특히 예산안 편성 파트에서 정보화사업·재난안전사업·공적개발원조(ODA)·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예산 집행 파트에서는 예산비중이 큰 출연·출자·보조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재정제도에서는 부담금 및 대외군사판매(FMS)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2부에서는 2022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내역을 다루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과정을 추가하였으며, 제3부에서는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의 재정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 글상자를 통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 장단기 국채금리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 검토,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비교 등 다양한 이슈들을 수록하였다.

[재정의 3대 기능]



III

연구·분석보고서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2022 대한민국 경제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발간일

8. 12.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대한민국 경제는 규모 면에서는 세계 10위이며, 2021년 무역액은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신냉전 국제질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직면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총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와 경제성장·경기대응을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경제정책,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경제현안을 소개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제 I 부 제1장에서는 국민경제의 구성, 원칙, 질서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각각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생산·분배·지출 측면의 경제구조를 다루었다. 제 II 부 제1장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제2장부터 제6장까지는 경제정책을 생산·분배·지출·성장·금융통화로 구분하여 소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 가격 상승, 가계부채,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상자산, 글로벌 가치사슬 등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였다.

Ⅲ

연구·분석보고서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2022 대한민국 조세

Tax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발간일

4. 29.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조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재원 조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경기안정과 같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경제의 역동성 회복,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마련, 소득불평등 완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조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제21대 국회 개원 기념 보고서의 일환으로 「2020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한 후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2022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해설서로서 조세의 일반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세목별 과세개요와 국제비교를 포함한 관련 주요 통계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최근 세법개정 사항을 함께 수록하여 최근 제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조세의 이해, 국세, 지방세, 조세지출 등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조세의 일반론과 함께 우리나라 조세법 체계 및 과세요건, 조세수입 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각 세목별 개요,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최근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4부에서는 조세지출의 의의, 유형, 예산제도, 관리제도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조세지출 현황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분석보고서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Local Finance of Korea, 2022

발간일

9. 26.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본 보고서는 당해연도 지방재정 현황 및 이슈 반영을 통한 예·결산 심사의 효과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간됐다. 아울러 지방재정에 대한 해설서로서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불균형 및 해소방안에 관심이 있는 주요 고객의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 3부('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2022년 예산 및 2021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재정분권 2단계 추진 현황 등 주요 지방재정 관련 변화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 현황 및 해외 사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현황, 지방행정구역 변경논의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에서는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등 현황 및 지방재정 통합자립도 등 주요 재정지표를 해당 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 2단계 추진현황을 제시하고, 제2차 지방이양일괄이양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전환사업과 재원 내역을 서술하는 등 재정분권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에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운영원칙, 지방재정에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권의 쟁점,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률체계 현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 논의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에서는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조정제도와,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체계 현황 및 주요국 사례를 정리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을 보론으로 추가했다.

Ⅲ
연구·분석보고서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발간일
4. 2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1월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50개이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생산,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R&D)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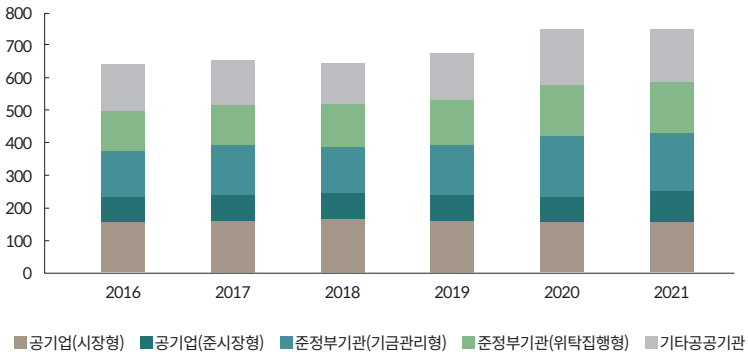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예산 기준 751조 2,591억원으로 2020년 결산 기준 751조 393억원 대비 2,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2021년 예산 규모는 정부의 2022년도 본예산 607.7조원보다 약 143.5조원이 더 큰 상황으로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1부 공공기관의 이해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연혁, 통제 및 관리, 지배구조 등 공공기관 제도의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공공기관의 핵심 내용인 재무, 유형, 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특징과 체계를 살펴보고 개별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일반 현황, 재무구조, 평가결과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연도별)]

(단위: 조원)



III

연구·분석보고서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2022 경제·재정수첩

Economic and Fiscal Statistics 2022

발간일

4. 2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수록한 「경제·재정수첩」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복잡한 경제·사회 현상의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서, 「2022 경제·재정수첩」은 신뢰할 수 있는 재정·경제 통계를 법안 및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22 경제·재정수첩」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경제통계'에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지역내총생산(GRDP), 주요 고용지표 등 거시경제 통계를, 제2부 '재정통계'에는 세입세출예산 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수록했으며, 제3부 '위원회별 통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규모와 주요 제도·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Ⅲ
연구·분석보고서
국가 재정·경제 안내서

2022 조세수첩

Tax Statistics 2022

발간일
4. 29.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 조세수첩」은 조세개요, 국세, 지방세, 조세지출 등 4개의 항목으로 본문을 구성하고,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와 조세용어 해설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조세개요에서는 조세체계, 조세의 분류, 조세체계의 변천, 조세수입, 조세부담률에 대한 기본적인 조세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구조, 지방세 비중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분석·정리하였다. 국세와 지방세에서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 및 국내외 현황, 최근 개정 동향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조세지출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현황과 2022년 일몰도래 항목을 소개하는 등 조세 관련 입법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2022 조세수첩」은 복잡한 조세체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세법 개정 내용 및 업데이트 된 국내외 통계자료를 통한 적시성 높은 조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안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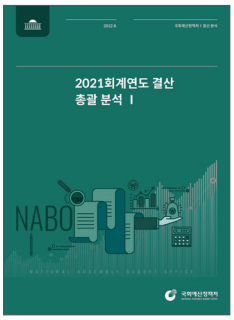
III
연구·분석보고서
예·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Fiscal Year 2021 Settlement of Accounts Analysis Series

발간일
8. 16.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정부는 2022년 5월 31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총수입은 570.5조원, 총지출은 601.0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개선되어 90.6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2021년 말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이 증가한 967.2조원으로 GDP 대비 47%에 달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주거안정 지원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④ 국회의 결산 심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구분	제목	발간부서
결산분석시리즈 I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	예산분석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 정무위원회 3. 기획재정위원회 4.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7. 행정안전위원회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11. 환경노동위원회 12. 국토교통위원회	
결산분석시리즈 III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I	
결산분석시리즈 IV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V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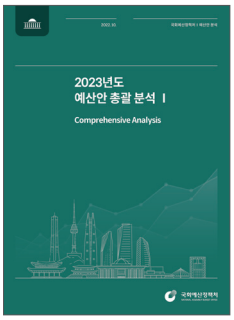
III
연구·분석보고서
예·결산 분석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2023 Buget Proposal Analysis Series

발간일
10. 31.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정부는 2022년 9월 2일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함에 따라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4.4%에서 -2.6%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3년 민간소비 위축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 악화 등이 전망됨에 따라, 국회가 국가재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으며,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를 추가하여 본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③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 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다. ④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고, 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으며, ⑥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구분	제목	발간부서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예산분석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 정무위원회 3. 기획재정위원회 4.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7. 행정안전위원회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11. 환경노동위원회 12.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V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VI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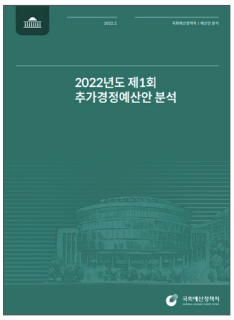
III
연구·분석보고서
예·결산 분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Analysis of the 1st Supplementaty Budget Proposal for 2022

발간일
2. 4.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정부는 2022년 1월 24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①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11.5조원), ② 방역 상황 지속에 따른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보,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비한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등 방역 보강(1.5조원), ③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추가 확보(1조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량분석과 정책별 분석으로 구성되었는데, 총량분석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재원 및 재정건전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정책별 분석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사업 재원의 충분성,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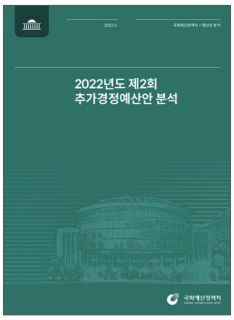
Ⅲ
연구·분석보고서
예·결산 분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Analysis of the 2nd Supplementaty Budget Proposal for 2022

발간일
5. 18.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정부는 2022년 5월 13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초과세수 53.3조원,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1조원, 지출구조조정 7.0조원으로, 이중 9.0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되고 세출 증액에 59.4조원을 편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26.3조원), ②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1조원), ③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3.1조원), ④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0조원), 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0조원) 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재원·재정건전성·국세수입 경정 등 재정총량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지원, 방역 보강, 물가안정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제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필요성·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III
연구·분석보고서
재정사업평가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Government Contribution

발간일
5. 18.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출연사업 규모는 2022년 기준 53.3조원(총지출 대비 8.8%)에 이른다. 출연금 규모는 2017~2022년 사이 연평균 8.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금은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특성상 집행상 탄력과 자율이 인정됨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출연금 예산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요인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국가재정법」 제12조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출연금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법은 출연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그 목적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출연예산의 42%에 달하는 사업출연 등을 기타에 포함하여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출연금이 법에 제정될 때와 비교해 달라진 사업출연금의 규모와 중요성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규정된 두 가지 유형 이외에 어떠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업이 출연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집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량의 범위가 넓고 반대급부가 없는 출연금이 남용될 여지를 막기 위해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에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출연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의 재정지원에 대한 비일관적인 현행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관의 운영과 사업의 법률적 차이를 명백히 구분하여 해석에 따라 출연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출연금의 통일된 정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에 대한 통일된 정산규정이 없어 사업별 또는 출연기관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출연금의 경우 지침상 관련 법령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없다면 소관부처에서 필요시 지침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명한 출연금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공통의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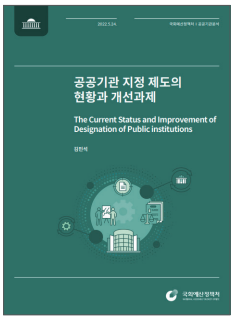
Ⅲ
연구·분석보고서
재정사업평가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발간일
5. 24.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2007년) 지정되었던 공공기관의 수는 298개였고, 2022년 1월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의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에 고용된 임직원(현원)은 2017년 32만 3,727명에서 2022년 1분기에는 41만 4,610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양적인 증가 및 공적 재원 투입의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의 기초가 되는 공공기관 지정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주요 개선과제와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세부적인 개선과제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행위와 운영, 목표 설정 등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공공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지정행위의 재량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공공기관 유형의 개념과 정체성 및 의의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각 유형의 구분 실익을 나누어 공공기관 유형 구분 체계를 재정비하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에서의 규율 수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세부적인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유형 분류의 세부 기준으로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요건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법령에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으며 이후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운영과 경영상 관리, 예·결산상 특수성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도의 규율이 적어 연구개발목적기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미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 내용이 별도 공시되지 않고, 재량의 범위와 미지정의 판단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미지정과 관련된 심사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정비, 이미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정 해제 시 해제 사유의 공시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분석보고서

재정사업평가

과학기술 인프라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사업 분석

Analysis of Large Accelerator construction Projects and Operat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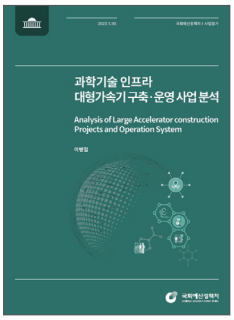
발간일

5. 30.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우리나라에는 3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총 6기의 대형가속기가 구축·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총 4조 5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사항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형가속기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래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수정·보완과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형가속기와 같은 대형연구시설은 대규모의 구축비용이 투자되므로 국가차원의 중장기로드맵 수립이 필수적이며, 관련 분야 중장기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정투자 효율성, 시설활용의 적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추진 전에 '사전 기술검증 R&D' 단계를 신설하여 본 사업 추진 시에도 R&D와 시설건설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형가속기를 포함한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은 '대형연구개발사업(R&D)' 측면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사업지연의 위험율이 높다. 이에 대형가속기 구축 이전에 '사전 기술검증 R&D'과정을 거쳐 기술개발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확인하고, 구축단계에서 R&D 사업과 시설구축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기술개발의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속기 전문인력 양성, 대형가속기 간 기술·인력·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대형가속기 운영체계 효율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형가속기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기술·인력·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유형별 빔라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대형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넷째, 차세대 가속기 개발과 주요 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 관련 산업체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형가속기 핵심장치의 국산화율은 점차 개선 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외산제품 의존율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높고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있는 대형가속기 장치와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와 산업체의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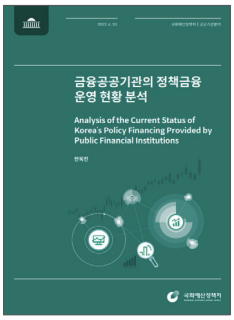
Ⅲ
연구·분석보고서
재정사업평가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Policy Financing Provided by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발간일
6. 10.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 지원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외에도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발생 시, 정책금융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금융의 공급은 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은 다양한 용어 및 범위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공공기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의 전반적인 현황 및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의 검토를 통해 정부 정책금융 지원의 적정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의 공급을 분석해 보면, 첫째, 지원 분야(중소금융, 수출금융, 개발금융, 주택금융, 서민금융)별로 볼 때, 주택금융과 중소금융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주택금융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확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즉, 연도별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금융 공급액의 2021년 말 잔액(1,647.2조원)은 2011년(662.7조원) 대비 총 984.5조원(148.6%) 증가하였는데, 이중 주택금융이 620조원(증가율 412.2%), 중소금융은 222.3조원(증가율 98.0%) 증가하였다. 둘째, 지원 방식(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별로 분석해 보면, 보증을 통한 공급 비중이 증가하여,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최근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세부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소관 주무부처별로 분석해 보면, 중소금융, 수출금융, 주택금융 등의 경우 소관 부처가 각기 다른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바, 각 소관 부처 및 금융공공기관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공급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2013~2022년의 10년간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총 47.6조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개인 서민금융, 주택금융 및 그 밖의 산업 개발·육성, 수출입 진흥 등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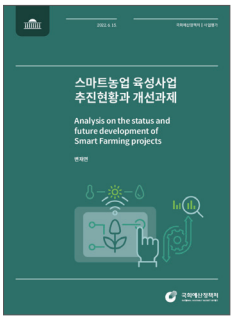
III
연구·분석보고서
재정사업평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Analysis on the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of Smart Farming projects

발간일
6. 15.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사업이 ① 시설 보급·확산, ② ICT 데이터 수집·활용, ③ 연구개발(R&D), ④ 산업인프라 구축 부문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부문별·종합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팜 등 시설 보급·확산 부문에 있어서 (1)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세대 소규모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향후 경영효율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및 규모화된 스마트팜 보급이 필요하다. (2) 스마트팜의 경우 딸기·참외·토마토·파프리카 4개 품목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노지작물·과수의 보급 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시장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 및 R&D 강화를 통해 추가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ICT 데이터 수집·활용 부문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환경, 유통, 소비 전반에 이르는 데이터 수집·활용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현재 데이터 수집·분석 비중이 높지 못하고 대부분 생산 관련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개발(R&D)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 농림식품 기술수준 대비 스마트농업 관련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및 융복합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타 산업 전문가 그룹과 협력 강화, 연구비 투자 확대, 개발기술 시장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인프라 구축 부문을 살펴보면, 낙농·양계 등 축산 부문과 중규모(2,000평) 이상 시설원예 부문의 스마트농업 시설장비의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의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은 영세하여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제품 성능 테스트, 실증연구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향후 정부는 전략품목, 목표시장, 관련 기술 등에 있어서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설 보급을 넘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진정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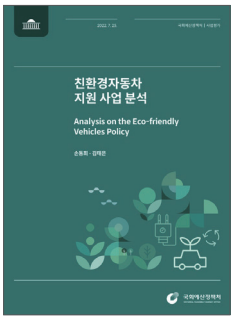
Ⅲ
연구·분석보고서
재정사업평가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Analysis on the Eco-friendly Vehicles Policy

발간일
7. 25.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친환경자동차로의 수송 패러다임 전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과 국내보급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적절히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을 산업 부문, 보급 지원 부문, 인프라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산업 측면에서는, 글로벌 기후위기대응의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확장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국산화율 및 기술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며,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도 높은 수준이므로, 기술수준향상 및 글로벌 공급망 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전과정평가(LCA) 도입 검토 등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너지믹스에 대한 고민과 환경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마련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급 지원 측면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체계적 사용, 국내 자동차 산업 지원, 충전소 부족 등 제반여건이 약한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구매보조금 예산을 정비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친환경자동차 구매목표제 등 비재정적 제도는 제도설계 상의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이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재정적 측면에서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충·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인프라 보급목표, 친환경자동차 보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프라 신규 구축과 기존 인프라의 운영·안전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분석보고서

재정사업평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Analysis on the Local Government-led Youth Employment Program

발간일

8. 9.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최근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였고, 비수도권 인구의 지속적 이탈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저하, 지역소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비수도권 인구의 이탈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한시사업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승계함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체계 및 합목적성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수'라는 단일지표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실적 및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자율지원 사항'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청년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참여자 모집 시 표준화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자율지원 내용 및 성과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효과 및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동 사업은 기업의 비용 절감에 집중되어 있고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계속사업으로서의 추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정책과 사업 연계 및 사업체계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일자리 사업유형을 '고용장려금 유형'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지자체와 위탁기관의 상시적·유기적 업무 협력관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 접근성 제한 및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사업홍보 및 관리창구를 일원화하여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동 사업을 통해 청년이 유입되고 실제로 지역에 정주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지표이므로 사업에 참여한 이후의 지역정착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일하는 사업장 지도 및 점검사항을 구체화·표준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환류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의 중도 탈락 원인분석 및 탈락자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근무환경 및 일자리의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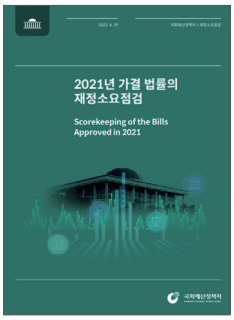
Ⅲ
연구·분석보고서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Scorekeeping of the Bills Approved in 2021

발간일
4. 29.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본 보고서는 2021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주요 특징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영향을 분석하였다.

2021년 가결된 887건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은 283건이며, 수입의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49건,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24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한 130건의 법률을 제외하고, 153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실제 예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21건의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9,472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중 국가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9조 3,462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2조 3,99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133건의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조 6,64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중 국가 지출은 연평균 6조 2,416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연평균 1조 4,225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재정수반법률의 지출 분야별 5년 동안 지출규모를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분야가 연평균 2조 3,871억원(38.2%)으로 전체 국가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연평균 1조 7,120억원(27.4%), 일반·지방행정분야 연평균 9,619억원(15.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반법률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살펴보면, 114건의 법률이 수입과 지출관련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 법률의 예산반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16건의 수입법률 제·개정에 따라 2022년 국세수입은 6조 2,202억원 감소하고, 국세외수입은 94억원 증가하여 총수입 6조 2,1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법률 예산반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출 법률 예산반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출 법률 98건 제·개정에 따라 31개 부처 예산에 2021년 2조 5,889억원, 2022년 5조 5,4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액의 5.0%(2021년), 37.1%(202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입법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법률과 예산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분석보고서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NABO Long-Term Fiscal Projections 2022~2070

발간일
8. 1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인구 및 경제, 재정 상황 변화에 맞추어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격년으로 보고서 발간)했다.

기준 시점(2022년 5월 말)의 정책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1년 12월 발표)에 근거하며, 거시경제변수는 동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NABO의 장기 경제전망(2022년 5월 말 기준)에 근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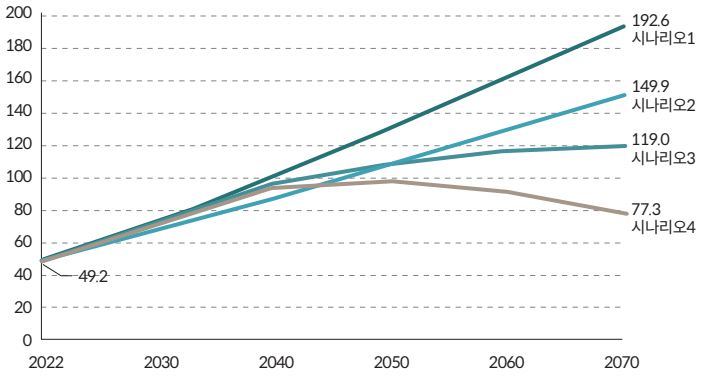
전망기간 동안 전망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전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재량지출 시나리오, 인구추계 가정(저위, 중위, 고위)에 따른 시나리오 등)하였다.

인구추계 중위 기준으로 재량지출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70년 기준으로 77.3~192.6% 범위로 전망(재량지출의 장기 수렴수준에 대한 가정 차이)된다.

본 보고서는 이외에도 인구추계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전망, 특정 국가채무 비율 유지를 위한 수지 개선분 분석, 사회보험의 적립금 소진 방지를 위한 국민부담률 인상분 분석 등 다양한 재정건전성 분석을 포함했다.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인구 중위 기준)]

(단위: GDP 대비 %)



Ⅲ
연구·분석보고서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NABO Medium-Term Fiscal Projection: 2022~2031

발간일
10. 3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을 10년 기간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운용 방향을 분석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효과를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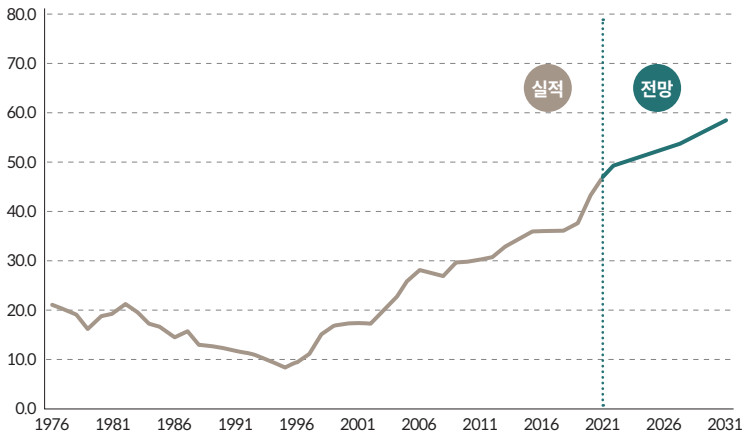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1년 12월 발표)에 근거하며, 거시경제변수는 동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NABO의 중기 경제전망(2022년 9월 말 기준)에 근거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 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정부의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과 재정준칙 도입 등에 따른 재량지출 통제 계획을 반영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III

연구·분석보고서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Understanding Bill Cost Estimation and Case Studie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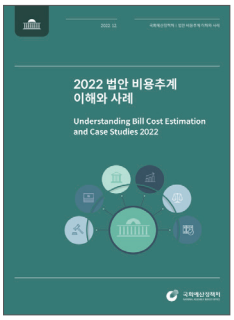
발간일

12. 2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전담기관이 된 2015년 이후 법안 비용추계의 회답건수는 2015년 1,994건, 2021년에는 4,91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는 이러한 비용추계의 양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유사 법안 시행시 예상되는 소요비용 등을 미리 가늠해보고 법안을 성안할 때 도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본 보고서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비용추계의 개념과 의의, 비용추계서 처리 절차, 최근 연혁 및 통계 등 법안 비용추계 제도의 전반을 소개함으로써 법안 비용추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2부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법안에 대한 추계기법 및 추가재정소요 등 비용추계 사례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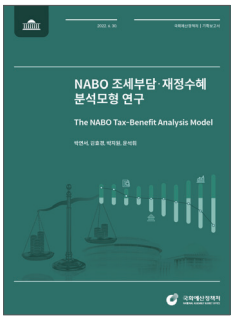
Ⅲ
연구·분석보고서
조세분석 및 연구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 모형 연구

The NABO Tax-Benefit Analysis Model

발간일
6. 30.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세·재정정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모형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 및 재정제도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직접 관측이 어려운 소비세·현물이전소득 및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요구가 빈번한 소득세 등의 추계모형을 포함하였다.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의 종류 및 소득수준·구성원 등의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접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조세부담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재정수혜는 3분위까지 감소하다가 4분위부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세부담에서 재정수혜를 차감한 순수혜는 5분위까지 양의 값을 보이다가 6분위에서 음의 값(순부담)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순수혜 규모가 작아지는 결과는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모형 내 제도별 측정방법 및 표본자료의 한계, 정책변화 외 다른 요인에 대한 가정 등의 전제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분석보고서

조세분석 및 연구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Fiscal Year 2021 Total Revenue Settlement Analysis

발간일

8. 16.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회계연도 총수입은 570.5조원으로 2020년에 비해 91.7조원 증가하였고, 2021년 추경예산을 56.0조원 초과하였다. 총수입 증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개선과 자산 관련 세수실적의 호조 등으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8.5조원 증가하였고, 기금수입 또한 자산운용수익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6조원 증가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을 통해 금년의 재정운용 및 내년도 세입예산안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총 3장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1장은 2021회계연도 총수입을 개관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2021년 총수입 실적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 국세수입은 세목별 증감원인, 대규모 세수오차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친환경 자동차 확대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국세 체납 및 국세정보 제공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별 분석과 8대 사회보험 결산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총칙의 국채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국채발행의 문제점 및 국세외수입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편성시 최근 실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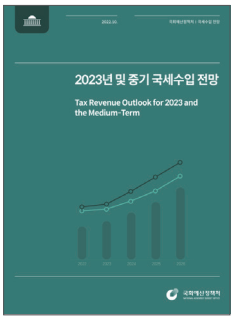
Ⅲ
연구·분석보고서
조세분석 및 연구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Tax Revenue Outlook for 2023 and the Medium-Term

발간일
10. 25.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본 보고서는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2026년의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전망과 비교·분석하였다.

2023년 국세수입은 399.4조원으로, 2022년 대비 4.6조원(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주요 세목의 증가율이 경상GDP 성장률(4.6%)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등 자산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인한 자산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 등에 기인한다. 한편,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안(400.5조원)과 비교하여 1.0조원(△0.3%) 낮은 수준인데,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증권거래세(△1.1조원) 등이 정부보다 낮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국세수입은 2022년 394.9조원에서 2026년 453.8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간 경상GDP 성장률 전망(연평균 4.2%)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로 법인세 증가율이 연평균 2.0%로 둔화된 가운데,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자산시장 부진으로 자산세수의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한 것과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세수감소형 세법개정안 등에 기인한다.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보다 5년 합계 21.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 감소규모를 정부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2조원 크게 전망한 것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NABO vs. 정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전망	394.9(14.8)	399.4(1.2)	413.2(3.4)	432.3(4.6)	453.8(5.0)	(3.5)
	경상성장률	4.7	4.6	4.3	4.1	3.9	(4.2)
정부	국세수입 전망	396.6(15.3)	400.5(1.0)	418.8(4.6)	439.2(4.9)	459.9(4.7)	(3.8)
	경상성장률	5.2	4.5	4.2	4.2	4.0	(4.2)
NABO-정부		△1.8	△1.0	△5.6	△6.8	△6.1	[△21.3]

주: ( )는 연평균 증가율

III

연구·분석보고서

조세분석 및 연구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Analysis of FY2023 Total Revenue Budget Propo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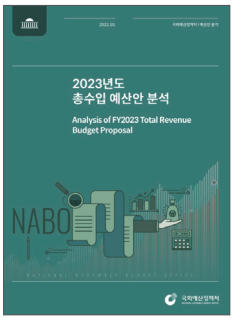
발간일

10. 31.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 총지출은 639.0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정부 총수입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8%로, 2022년 총수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 7.6%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금리 인상 및 자산시장 둔화에 따른 자산 관련 세수의 감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수감소형 세법개정안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2023년도 총수입을 전망하는 한편, 자산관련 세수의 변동성을 고려한 세입예산안 편성 등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예산편성의 합리성·정확성 제고방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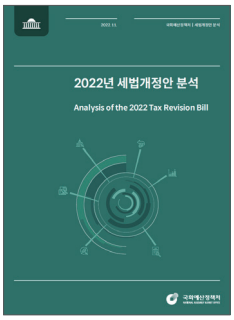
Ⅲ
연구·분석보고서
조세분석 및 연구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Analysis of the 2022 Tax Revision Bill

발간일
11. 2.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특징과 세수효과, 세부담 귀착 효과 및 개정 효과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이라는 정책목표 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단순화, 법인세율 인하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2027년 동안(이하, 누적법[1] 기준) 총 73.6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의 세부담(순액법)은 2023~2027년 8.3조원 감소하고, 개인의 세부담은 4.7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둔 방안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정책의 효과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경우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감세형 세제개편과 최근 긴축 통화정책 기조의 정합성, 세수 감소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 다각적인 논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1) 세수효과 산출 시 누적법은 연도별로 기준연도('22년) 대비 세수효과를 누적하여 총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며, 순액법은 연도별로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을 계산함으로써 연도별 세수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III

연구·분석보고서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2022 경제전망

2022 Economic Outlook

발간일

5. 30.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2022년 국내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나,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점차 강화되며 연간 2.6% 성장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완화기조,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장기간 부진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 전환할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공급망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 자본재가격 상승 등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총수출은 재화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총수입은 수출용 중간재와 원유 및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에서 장기간 감소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로 전환되면서 연간 4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이어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며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1.4%)을 크게 상회하는 4.0%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고채 금리(3년만기)는 대내외 통화긴축 본격화,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Ⅲ
연구·분석보고서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Economic Outlook for 2023 and the Medium-Term

발간일
10. 5.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 각각 2.5%, 2.1% 성장할 전망이다. 지출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2022년 소비심리 회복,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예정이나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2022년 부진이 예상되나, 2023년에는 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총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성장 및 금융 부문에서는 잠재성장률, 총요소생산성, 금리 등을 전망하였으며, 2022~2026년간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연평균 2.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2026년간 국고채(3년) 금리는 연평균 2.8%로,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전 5년(2017~2021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부문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을 전망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건설업(-0.1%)을 제외하고 제조업(2.3%), 서비스업(2.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7%)의 부가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글로벌 하방 압력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에서는 한 해의 부가가치가 가계, 기업, 정부에 분배되는 구조와 인구 및 고용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임금근로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인 피용자보수는 2022년 8.3%, 2023년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잉여는 2022년 소폭 감소 후 2023년 증가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는 합계출산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2~2026년 동안 연간 0.11%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자 수는 2022년 큰 폭으로 증가(2.9%)한 후 2023년부터 0.3~0.4%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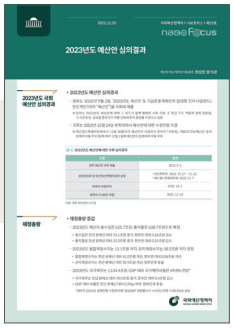
IV

정기간행물

- NABO Focus
- NABO 재정동향&이슈
-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 NABO 경제 동향
- 예산춘추
- 예산정책연구

Ⅳ 정기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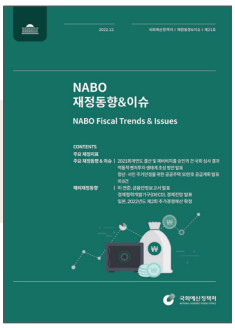
NABO Focus



발간호	제목	발간부서
제4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예산분석총괄과
제42호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분석	거시경제분석과
제43호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추계세제총괄과
제44호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세제분석2과
제45호	최근 엔화 약세의 배경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점검	경제분석총괄과
제46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예산분석총괄과
제4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사회예산분석과
제48호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	거시경제분석과
제49호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향후 전망	산업자원분석과
제50호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산업자원분석과
제51호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	추계세제총괄과
제52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산업자원분석과
제53호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주요내용	예산분석총괄과
제54호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행정비용추계과
제55호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예산분석총괄과

Ⅳ 정기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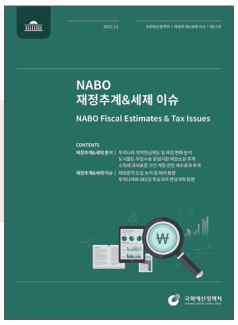
NABO 재정동향&이슈



발간호	구분	주요내용
제19호	주요 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동향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수정의결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및 적립금 투자 동향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발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주요 재정이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발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제20호	주요 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동향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2023년도 정부 주요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현황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주요 재정이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최초비행 성공 발표
제21호	주요 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동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 심사 결과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
		방위산업 수출 최신 동향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주요 재정이슈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Ⅳ 정기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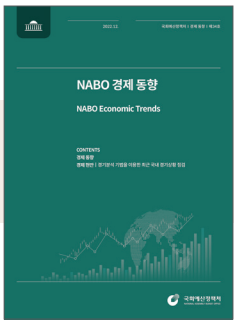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발간호	구분	주요내용
제18호	재정추계&세제 동향	2021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등
	재정추계&세제 분석	2022년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2022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등
	재정추계&세제 이슈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 등
제19호	재정추계&세제 동향	2022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2년 1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등
	재정추계&세제 분석	온종일돌봄체계 분석 및 재정소요추계
		참정권 확대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등
	재정추계&세제 이슈	디지털세제의 최근 논의 동향
제20호	재정추계&세제 동향	2022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2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등
	재정추계&세제 분석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따른 지출소요 추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소요분석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등
제21호	재정추계&세제 동향	2022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2년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등
	재정추계&세제 분석	우리나라 직역연금제도 및 재정 변화 분석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소요 추계 등
	재정추계&세제 이슈	재정준칙 도입 논의 및 해외 동향 등

Ⅳ 정기간행물

NABO 경제 동향



*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가 제28호부터 「NABO 경제 동향」으로 개편(2022. 4.)

발간호	구분	주요내용
제25호	경제·산업동향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2022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장래 인구변화를 반영한 노동공급규모 전망
	경제·산업이슈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6호	경제·산업동향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한국 ESG투자 확산의 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경제위기 회복국면의 시기별 특징 및 시사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성취도 분석
	경제·산업이슈	주택가격 영향요인 분석
제27호	경제·산업동향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경제 동향
		2021년 4/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 작성의 보안방법 연구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통계를 중심으로-
	경제·산업이슈	경제성장에 다른 환경개선효과 실증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제28호~제34호	지출	소비·투자·대외거래·소비자물가
	생산·고용	생산·고용·인구
	금융·자산	금융시장·에너지 및 원자재·부동산
	해외경제 동향	미국·중국·유로지역·일본 등

Ⅳ 정기간행물

예산춘추

발간호	구분	주요내용
첫 번째 (통권 제65호)	특집	2022년도 예산안 등 국회 심의 주요 내용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현안진단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TVC)의 구축 전망과 함의
		디지털세 최종합의의 의미와 대응과제
	기획연재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R&D 분야
		대전환 시대 재정의 역할
두 번째 (통권 제66호)	특집	새 정부 출범과 재정정책의 과제
		국가부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현안진단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획연재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산업·중소기업 분야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전환 시대, 대학 재정의 역할
세 번째 (통권 제67호)	특집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사 방향
	현안진단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향후 전망과 정책 대응방향
	기획연재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교육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
네 번째 (통권 제68호)	특집	2023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심사 방향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현안진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다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3고(高)의 현황과 전망
	기획연재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환경 분야
		탈세계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

Ⅳ 정기간행물

예산정책연구

발간호	논문제목	저자
제11권 제1호 (통권 제25호)	탄소중립에 따른 발전부문 에너지세제의 중장기 세수 전망과 시사점	이동규·김재엽·조성진·강성훈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정미진·최상옥
	주택 공시가격 평가에 대한 형평성 분석	강성훈
	공공기관 부가가치 추계에 관한 연구	박경진·이호진
	'기본소득 눔프지수'를 이용한 증세 태도 연구	최광은
제11권 제2호 (통권 제26호)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채택요인에 관한 연구	장유미·김영록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구축 및 운영 : 가능성과 한계	한세억
	정부지출의 고용 효과	홍민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성명재
	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영 확대 가능성 검토	정성호
제11권 제3호 (통권 제2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장기 재정여력 개선 효과	김학수
	코로나19와 공적이전 프로그램이 빈곤에 미친 영향: 세부집단별 분석을 중심으로	하태원
	성별 차이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미치는 분위 효과 분석	송호신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령대별 효과를 중심으로	이정우·홍우형·김두언
제11권 제4호 (통권 제28호)	국가간 분석을 통한 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 실증분석	허경선·한종석·김나리·허윤지
	정치경제적 요인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승문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지출의 배분 효과	문외솔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최한실·황태원·이진형
	국제기구 근무자의 연금지급정지 강화 방안: 국제기구 근무 시 근로소득의 비과세로 인한 연금재정을 중심으로	김수성·노상윤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HAPTER

V

법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회답

- 법안비용추계 현황
-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 법안비용추계와 조사·분석의 요구 및 회답 절차

법안비용추계 현황

법안비용추계 개관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은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추계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다. 준비된 법안의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려면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의안비용추계요구서식을 작성하여 FAX(02-6788-3742)를 통해 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에 송부하면 된다.

법안비용추계 회답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출범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로 총 24,188건의 비용추계를 회답하였다.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2004년에는 비용추계 회답이 59건에 그쳤으나, 2005년(제17대 국회)에는 168건을 회답하였으며, 2009년(제18대 국회)에는 588건, 2013년(제19대 국회)에는 866건을 회답하는 등 회답건수가 증가하였다.

2015년 3월 19일부터 의원 발의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고, 위원회 수정안·대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비용추계 회답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비용추계 회답건수는 제19대국회에서는 연평균 1,093건이었으나, 제20대국회에서는 연평균 3,121건까지 증가하였고, 제21대국회에서는 2021년 4,910건, 2022년 4,007건의 회답 건수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비용추계 회답건수

(단위: 건)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용추계 회답건수	3,179	2,779	4,645	4,910	4,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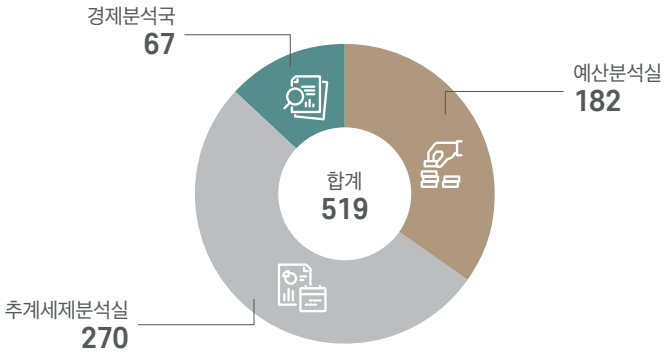
주: 연도별 회답실적은 비용추계 의뢰연도 기준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실·국별 조사·분석 회답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조사·분석 요구에 대하여 회답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회답한 조사·분석은 모두 519건이다.

(단위: 건)



최근 5년간 조사·분석 회답 현황

(단위: 건)

법안비용추계와 조사·분석의 요구 및 회답 절차

요구 및 회답 절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와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01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요구(위원회 또는 의원)

- **오프라인 :** 요구서식 작성 후 FAX로 제출
- **온라인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요구서식 다운로드**

조사분석요구서

의안비용추계요구서

조사분석철회서

의안비용추계철회서

02

접수 및 분류(정책총괄담당관실)

- **담당전화번호 :** 02-6788-4665
- **접수 FAX번호 :** 02-6788-3742

03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소관부서)

- **조사분석 :** 각 실국 소관 부서
- **비용추계 :** 추계세제분석실

04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소관부서)

- 전자공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이메일 회답

2022 NABO 연차보고서

발간일 2023년 5월
발행인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인 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ISSN 2982-9208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5-001582-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